

2026 - 2호
(2026. 7월 다섯째주)

정책 동향

◆ 국정 동향

◆ 시정 동향

◆ 타시도 동향

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

<https://council.jeonnam-gwangju.go.kr> / 062-613-5194

목 차

I. 국정 동향 1

- ① 【행정안전부】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1
- ② 【기후에너지환경부】 지속가능성(ESG)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.. 2
- ③ 【보건복지부】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 ‘AI 기반의료 전략’ 발표 ... 3

II. 시정 동향 4

- ① 【예산담당관】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위해 전방위 대응 강화 4
- ② 【토지정보과】 전국 최초 디지털공간정보 활용 공유재산 통합관리 5
- ③ 【미래차산업과】 산학연관 ‘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’ 유치 총력 5

III. 타시도 동향 7

- ① 【강 원 도】 전국 최초 시멘트산업 상생협약 체결 7
- ② 【전 북 도】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개시 8
- ③ 【경 남 도】 전국 최초 ‘농촌특화지구’ 지정 9

국 정 동 향

1

행안부,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

-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‘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’를 개최하고,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방안 및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힘.
- 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, 교육부·문화체육관광부·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.
- 정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‘원팀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정책 협의체 운영과 인사교류 등을 통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며, 통합돌봄·자살예방·재난안전 등 주민 밀착 정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.
- 또한,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,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,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비한 인력·예산 확보와 폭염 속 옥외 노동자 보호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청함.
- 아울러,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새마을운동,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, 여름철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.

- 정부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지속가능성(ESG)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교육 확대는 기업이 공시제도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전과정평가(LCA) 등 핵심 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.
- 먼저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(LCA)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, 분야별 심화과정 교육 인원을 기존 700명에서 1,000명으로 늘릴 계획임.
- 또한 기초·종합·심화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해 기업의 ESG 실무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.
- 아울러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기준을 반영해 오는 8~9월 운영되는 ‘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’에 특별 세션을 신설함.
- 이 과정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발간한 스코프(Scope) 1·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지침을 교육에 포함해 기업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임.
- 또한 11월에는 ESG 국제(글로벌) 교육 연수회(워크숍)를 의무 공시 중심으로 운영하고, 일본과 호주 등 공시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의 담당자를 초청해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임.
-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2028년 본격 시행되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.

- 정부는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'AI 기본의료 전략'을 발표했음.
- 이번 전략은 '생명을 위한 AI,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'을 비전으로 3대 전략·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(AI) 기반 의료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먼저 전국 보건소·보건지소와 의료취약지역 의원에 AI 진료·행정·건강관리 솔루션을 보급하고,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임.
- 또한 섬·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운영하고,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 사업에도 AI를 활용할 예정임.
-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지원하는 '응급 통합 AI 플랫폼'을 구축하고, 중앙 응급관제시스템 고도화와 스마트 응급실 개발을 추진함.
- 이와 함께 개인건강기록(PHR)을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체계와 '국민 AI 건강비서'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.
-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2029년까지 전국 권역·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'공공의료 AI 고속도로'로 연결하고, 노후 공공병원 전산시스템 개선과 AI 친화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함.
- 또한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도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.

시정 동향

1 예산담당과,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위해 전방위 대응 강화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심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국고 확보 TF 운영, 기획예산처 방문, 전략보고회 개최, 지역 국회의원 협력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.
- 먼저 국고 확보 TF를 운영해 중앙부처 반영 현황과 미반영 사유를 점검하고, 실무부서와 간부진의 기획예산처 방문을 통해 사업별 쟁점에 대응하고 있음.
- 특히 영암~광주 고속도로 건설,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,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장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적극 설명하며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음.
- 또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, 광역 생태동물원 조성,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건의했음.
- 투자사업관리 분야에서는 경전선 광주송정~순천 전철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음.
- 아울러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스마트 축산 인프라 구축, K-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, 마른김 집적화단지 시범조성, 전복 가두리시설 감축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음.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시장 주재 전략보고회를 통해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과 사업별 쟁점을 점검.
-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.

2 토지정보과, 전국 최초 디지털공간정보 활용 공유재산 통합관리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디지털공간정보(GIS)를 활용해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‘공유재산 통합관리기능 시스템’을 개발해 7월 20일부터 운영함.
- 이번 시스템은 기존 텍스트 형태의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재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누락 재산과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실시간으로 등록·관리하는 기능을 전국 최초로 구현함.
-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없이도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부동산종합공부 등 공적 장부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행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됨.
- 또한 지난해 구축한 도로점용 관리기능의 운영 경험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연계한 비예산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함.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, 인공지능(AI) 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임.

3 미래차산업과, 산학연관 ‘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’ 유지 총력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업통상부의 제3기 반도체 소재·부품·

장비(소부장)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기업·기관·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
- 이를 위해 국회에서 미래차 반도체 소부장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화단지 조성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음.
- 먼저 간담회에서는 하남·첨단·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,551억 원을 투입해 개발-실증-양산을 아우르는 전주기 공급망과 고성능 AP 모듈 국산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이 공유됐음.
- 또한 AI 기반 소자·회로 통합설계 기술을 활용한 차량용 반도체의 신뢰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됐음.
-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현장 맞춤형 정책과제가 제안됐음.
- 패키징용 열관리 실증센터 구축, 국산화 실증 확대, 반도체 칩 집적화(SoC)부터 완제품까지 병렬형 개발체계 구축, SLT 검사장비 R&D 트랙 신설, 실증 라인 개방, 차량용 AP 모듈 패키징 지원 등 산업계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가 이어졌음.
- 참석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유치와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음.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해 미래차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.
- 이를 통해 읍면동 중심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,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제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타 시 도 동 향

1

강원, 전국 최초 시멘트산업 상생협약 체결

-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시멘트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, 고용노동부, 한국시멘트협회, 원청사·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근로자 중심의 상생협력을 추진함.
-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대상 가운데 처음 체결된 사례로, 원청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.
- 먼저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안전·보건, 고용 안정, 근로환경, 복리후생, 협약 이행 및 성과 확산 등 5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며, 상생협력 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.
-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임.
- 또한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·예방접종 비용 지원,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, 휴가비 지원,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해당 사업에는 2,922명이 신청해 목표 인원(1,820명) 대비 160.5%의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.
-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멘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,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.

-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물류 서비스로 상용화했음.
-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~한진 전주터미널~대전 메가허브를 잇는 편도 118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운영하며,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자율운송 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.
- 먼저 해당 서비스는 주 3회 정기 운행되며,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톤급 대형트럭 ‘맥센(MAXEN)’에 라이드플렉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운영됨.
- 특히 간선 물류 운송부터 터미널 내 무인 도킹까지 화물 운송 전과정을 자율주행으로 구현해 기업 간(B2B) 물류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용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음.
- 또한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·반복 운행이 많은 물류 구간에서 운전자 부족 문제 해소, 물류비 절감, 운송시간 안정화, 운행 데이터 축적 및 경로 최적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.
- 이를 통해 물류산업 생산성 향상과 자율주행 기반 운송서비스 산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-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, 실도로 기반 검증체계를 바탕으로 레벨3 기능 검증부터 레벨4 기술 실증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했음.
- 앞으로도 자율운송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물류, 대중교통,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로 자율운송 서비스를 확대해 대한민국 자율운송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.

- 경남 합천군이 「농촌공간재구조화법」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,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와 농촌마을보호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의 현장 적용을 본격 추진함.
- 이번 지정은 2024년 3월 시행된 「농촌공간재구조화법」에 따른 첫 사례로, 올해 2월 수립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'멍스데이'와 연계한 '펫-웰니스 상생플랫폼'을 중심으로 조성 계획임.
-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·판매,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위케이션 공간 조성, 산책로(안심 땀대이길)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.
-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 힐링숲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할 예정임.
-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합천군 사례를 전국 선도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,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.